

23일 Market Index			
코스피	2701.69	코스닥	773.26
	(-5.98)		(-0.21)
금리	2.920	환율	1328.00
	(+0.013)		(-6.70)



세대별 차등, 자동화 재정 등 '정부표 연금개혁' 윤곽

尹, 이번주 국정 브리핑 청년세대 부담 완화 중점 여야 논의 급물살 기대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 연금 개혁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 방향성을 공개한다. 이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포함해 추진되는 정부의 '4+1 개혁'의 일환이다.

(관련기사 6면)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의 9% 수준인 현행 연금 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인상하는 방안이다. 수십년에 달하는 향후 납입 기간 동안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보험료를 목표치까지



이스라엘-헤즈볼라 '상호 공습'

중동 확산 위기를 조성하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25일(현지시각) 상호 공습에 나섰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이스라엘에 제거된 푸아드 슈크르 사령관과 관련해 보복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은 전국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헤즈볼라는 이날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시작했다. 사진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 위를 이스라엘 아파치 헬리콥터가 날고 있다. /뉴시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 세대는 0.5%포인트(p), 중·장년층은 1%p씩 인상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인상이 불가피한 가운데 소득대체를 대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장년의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는 만큼 정년을 10년 이상 앞둔 4050 세대가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어 함께 논의 중인 '자동 재

정 안정화 장치'는 향후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만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 및 출생률 하락 추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개혁안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개혁을 논의했다. 여·야는 보험료를 인상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여·야간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졌다.

이후 여·야는 오는 9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에서 연금개혁 안건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가 연금



메트로경제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

AI 시대, 지능화된 물류의 흐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물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흐름(flow)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의 미래 기술이 더욱 발전하며 그 흐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찾아온 글로벌 경기침체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과 물건을 더욱 빠르고 저렴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시키느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최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주최하는 '2024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그 인사이트를 드립니다.

- ◆ 주 제 : AI시대 FLOW전략 이동의 한 순간, 물류의 매 흐름
- ◆ 일 시 : 2024년 9월 25일 오후 2시~5시
-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르다워 페럼홀
-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등 록 :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 문 의 : 2024 물류 & 모빌리티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기조강연 :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산업본부장



혁의 추진 목표를 달리하면서 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에... 이복현 "개입 필요성 강하게 느껴"

"관리 대신 금리인상은 잘못 정부가 바란 게 아니야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現 경영진도 책임져야"



대) 등 대출금리를 연이어 끌어올리는 현상에 대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 해선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지난 2~3개월간 가계부채가 정부의 관리 범위보다 늘어난 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 엔고금리 상황에서 가계 생활자 금으로 쓰인 걸로 보이고 최근에

는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구입 목적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를 놓고 개입 가능성을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압박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리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은행권에 '가격(금리)을 올리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시장금리 하락에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한 것을

두고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있다.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은 정부가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들의 연초 사업계획 및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깎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금융당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인위적인 금리 개입에 나선다는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의 '레고랜드 사태'나 '은행권 상생금융' 사례 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명시적인 개입은 2번 정도였다"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은행채로의 자금 쏠림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 특성상 관련법으로 근거가 있어서 그에 따라 개입했고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 경영진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이승용·허정윤 기자 lsy266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기시다 방한 일본과 협의 중... 추후 결정되면 공지"
▲ 정진석 "무쟁점 민생 법안 정쟁 분리 처리 '패스트트랙' 만들자" /사진 뉴시스

▲ 민주 "한동훈, 허수아비 대표 아니면 채해병 특검법 내일까지 발의하라"
▲ '코로나 입원' 이재명, 당에 '윤석열 정부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



▲ 한동훈 "추석 전후 물가관리에 만전 기해야" /사진 뉴시스
▲ 민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의료공백 공포... 윤 직접 해결해야'